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서

“자치경찰제 시행 추진 발 빠른 대응 준비를”

행자위, 전북도 자치행정국·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서
직원 사기진작 고민·공무원 후생복지조례 규정 준용 등 주문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8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 “직장 내 사기진작을 위해 정시출퇴근 Day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과 삶의 질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취지에 맞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볼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의 물품입찰 계약 건에서 도내 낙찰업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수입물품 보유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도내 낙찰업체에서 수입물품을 납품하기 내에 제때 납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구조구급장비가 제때에 납품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정부에서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북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 발 빠른 대응이 선행되도록 준비할 것”을 전했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은 “포상금 관련 조례규칙에 근거가 없으면 포상금 명목으로 가족을 산업시찰에 동반할 수 없도록 2018년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었음에도 전북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상의 불명확한 규정을 준용하여 ‘노부모 및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등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다”며 신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근무성적평가 및 직무성과평가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이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난독 학생 지원 근거 마련

교육위, '도교육청 지원 조례' 심의·의결

도내 난독증 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읽기 곤란(난독) 학생들까지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학생이 학습 더딤과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

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전라북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난독 학생 실태 파악과 함께 필요한 검사 지원, 난독 인식개선과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이다. 특히,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 등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책무를 담았다. 박희지(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기존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로 난독증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지원하는 조례로 해석될 수 있어, 글자를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 학생들까지 지원하도록 이번 조례로 전부개정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환복위, 임실 보건환경연구원·남원의료원서 현장 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현지 의정활동으로 임실군 신덕면 폐기물 반입현장 및 임실군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과 남원시 소재 남원의료원을 방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관 기관을 방문해서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청취하고, 아울러 현지 기관의 주요 시설을 점검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한 환경

복지위원들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 대기질 개선 기반시설 구축, 농수산물 잔류농약 및 식품 유해물질 검사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및 식약품 안전성 확보,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에 대한 대응방안 및 추진상황을 듣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서 남원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전문의료진 확충, 시설 장비의 현대화, 친절한 병원 만들기 등을 통한 고

객만족도 제고 등 그간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 3주기 급성기병원 '인중' 추진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내실 강화에 대한 올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남원의료원의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현지시정활동에 나선 최찬욱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심층 연구 분석으로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만연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4당 “한국당, 전두환 정당 선언”

여야 143명 공동주최로 긴급토론회 열려
홍영표 “범죄적 망언 의원들 반드시 추방”
장병완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 자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143명 공동주최로 열린 5·18 만연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 당시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 조치한 한국당을 규탄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전날 한국당의 결정을 보면서 한국당은 전연 스스로 전두환·노태우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겠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국민이

국회를 괴물도 볼 거 같아 두렵다”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아무리 당권이 중요하고 대권이 중요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다”라며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커다란 자부심이다. 민주주의 표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출마를 해서 징계를 유예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당다운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민주주의를 전연 스스로 부정하는 대로 뇌물 수가 없다”라며 “민주주의 정당과 국회를 지켜야 한다. 오죽하면 김현철씨가 한국당에서 YS 사인을 떼어달라고 했으면 안 된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적 단죄하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

권에서 1990년 정식으로 규정을 했다”라며 “한국당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러한 전횡마저도 부인하고 극우세력들을 자신들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 자행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이후에도 윤영석 의원이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또 주장했다”라며 “20대 국회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극우세력 망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19에 의한 5·18과 87민주항쟁, 민주주의 역사는 대한민국에 울퉁게 뿌리박은 헌법적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며 “그걸 부정하는 국회의원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없고 빨리 퇴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따위 친박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적 단죄하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

“5·18 영령들과 민주주의 모독한 가짜뉴스 뿌리 뽑을 것”

천정배 의원, 법안 발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공주 서구)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5.18 망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같은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주연론시민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18 관련 가짜 정보의 발원지는 대부분 지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지만원의 시스템클럽)와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뉴스타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

서 시작된 가짜 뉴스가 개인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5.18 왜곡, 날조 정보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에 5.18 영령들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